

마르크스와 미래의 기념비들

3강 『자본』 : 자본의 축적법칙과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

강사 : 이진경

1.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일반화되었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 기계의 타자성에 대한 공포가 만드는 헛된 공상이나 영생의 꿈이 만드는 종교적 몽상보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이런 문제도, 기계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정도의 통념적 전망에서 크게 진전된 게 없어 보인다. 이로부터 이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비약하는 경우도 매우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의학적 진단을 하게 되면 의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지만, 그것이 예술적 창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인간이 예술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예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술을 하지 않을 이유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노동’의 경우라면, 인간은 분명 인공지능과 대체재적 경쟁관계에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언제나 그랬듯이 두 가지 상반되는 전망이 있는 듯하다. 기계와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경영학자(Brinjolfson/ McAfee, 2014)의 낙관적인 전망과, 실직 위험을 강조하며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우려하는 책(Ford, 2016)의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전망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확산이라는 기술적 변화로부터 사회적 변화를 직접 도출하기에 예측은 낙관이든 우려든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다. 가령 이런 입장은 인공지능이 노동에 초래할 변화는 말하지만 그것이 자본에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여 노동이 거의 소멸된다면, 자본은 기계가 생산한 부를 느긋하게 향유할 수 있을까? 그러나 노동자가 그렇게 사라진다면, 기계가 생산한 상품은 대체 누가 구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예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기했고 반박당했던 ‘과소소비론’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일까?

자본에 초래할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착한 이들은 ‘실현문제’라고 불리던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생산’에서 발생할 사태를 주목한다.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며 우려했던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상품 생산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게 작아지면서 자본주의가 ‘사멸’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이런 전망 속에서 ‘공유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예견한다(Rifkin, 2014). 메이슨은 이와 유사한 생각을 ‘포스트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요약하며, 맑스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Mason, 2017). 네그리와 하트는 어쩌면 누구보다 먼저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Negri/ Hardt, 2014)

상품생산의 영역에서 발생할 이런 문제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같은 궤도를 그리며 나아갈 것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종말로 귀착될 그러한 사태에 대해 자본가들이 그대로 손 놓고 있을 리 없으리라는 자명한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공유사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계비용감소나 잉여가치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1980년 미국의 차크라바티 판결 이후 가속도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게 감소해도 이윤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 또한 쉽게 사멸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인공지능 이후 자본주의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전통적인 맑스주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상징하는 고도의 생산력과 법을 앞세운 ‘경제외적 강제’를 필수적 요건으로 삼는 생산관계의 모순은 또 다시 해결하기 힘든 난점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소멸하여 대중의 구매력이 사라진 조건에서, 법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는 이윤의 생산체제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또 하나 추가해야 할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소비행위마저 피드백시스템을 통해 생산과정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소비는 단지 생산된 가치를 어떻게든 ‘실현’하면 되는 외적 요소가 아니다. ‘생산이 소비를 규정한다’는 말 못지않게 ‘소비가 생산을 규정한다’는 말 또한 유효성을 갖는다. 앞서 ‘시장이 소멸한 자본주의’에서 상품가치의 실현문제가 위치지워져야 할 곳은 여기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변화를 자본의 재생산과 순환과정 속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자본의 축적법칙과 재생산양식을 통해 인공지능의 미래를 사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맑스가 『자본』에서 제시한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에 대한 법칙들은 이러한 사태들에 함축된 역사적 경향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보인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축적법칙을 통해 인공지능 이후의 축적체제에 대해 예측해보고자 한다.

2. 자본의 축적법칙과 인공지능

1) 유기적 구성의 증가와 ‘노동 없는 생산’

맑스의 후자본경전체가 자본의 운동법칙에 대한 것이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자본의 축적법칙’으로 명명했던 것은 자본의 축적에 따라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소재적 측면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량의 비율을 표시하는 기술적 구성을 가치의 향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유기적 구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노동력의 축출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특유한 인구법칙”(Marx, 2001(I): 861~86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직관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생산력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소멸하게 되는 현금의 사태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경향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표현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비용감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뜻대로 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기계들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노동력이란 상품은 자본가가 구매한 것이기에 구매자인 자본가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노동력이란 애초에 노동자들의 능력이기에 그것의 사용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의지 아래 있기 때문이다.¹⁾ 유기적 구성의 증가란 것처럼 독립적 의지를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과정에서 축출하려는 자본가의 의지의 경제학적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점에서 인공지능은 자본가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다. 그것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유지·개선비용 말고는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그것의 작동은 자본가 자신의 의지 아래 전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와 달리 다치거나 지치는 일 없이, 지겹다는 의식이나 저항 없이 24시간 생산하게 할 수 있기에, 그것은 자본가들의 유토피아로 안내하는 궁극의 기술이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려는 기획은 사회정치적 마찰력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노동 없는 생산을 향한 경향이 멀지 않은 미래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극한값에 근접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령 2013년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700개 정도의 직종 가운데 50% 정도가

1) 이런 의미에서 노동력 상품의 사용으로 정의되는 ‘노동’이란 그 자체로 계급투쟁을 함축하고 있다(이진경, 2004: 159-160).

완전자동화가 가능하리라고, 즉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Ford, 189). 이와 유사한 추정은 지금 더욱더 늘어났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4월 지점 80%를 폐쇄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해 ‘지점 없는 은행’ 시대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조선일보, 2017. 4. 12).

하지만 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다. 하나는 ‘노동의 종말’ 내지 ‘일자리 절대적 감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적 구성의 감소에 대한 것이다. 첫째 논점은 이전에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에 의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났음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태 또한 비슷할 것이라는 반론과 관련된 것이다. 산업혁명에 의해 농업에서의 일자리가 격감했지만, 그 대신 공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정보통신혁명 이후 사무직을 비롯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역시 관련된 다른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의 일자리를 없애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굳이 ‘강한 인공지능’을 가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가 일자리 감소에 동반되리라는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각각의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작업은 정해진 것으로 제한되지만, 인공지능 자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일반성을 갖는다. 즉 다른 기능이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 새로이 생겨난 일자리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노동의 영역에서 노동자를 축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그 틈새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없거나 잘 못하는 일도 있고, 인간의 ‘보조작업’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일자리를 갈음하기엔 턱없이 적을 것이다. 또 그것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하이테크 직업이 아니라 청소나 데이터 확인작업 등과 같이 인공지능의 그늘에 있는 ‘로우테크’ 직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예전의 대체현상과 다른 점이다.

둘째 논점은 노동이 소멸한다고 해도 유기적 구성이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변자본으로 사용되는 기계 등 소재적 비율이 크게 늘어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수단이 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곧바로 유기적 구성의 감소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무어의 법칙’이 표상하듯이 기술적 발전의 속도가 지수적이고 그에 따른 상품생산비용의 감소 또한 지수적이라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고 하기 어렵다. 가령 한계비용이 0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라 노동력이 0에 가까이 간다고 해도 불변자본 비용 또한 0에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소재적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유기적 구성이 증가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것이 그대로 상품가치에 반영된다면 상품가치 또한 0에 가까이 갈 것이고, 결국 잉여가치 또한 감소하여 0에 수렴할 것이다. 이 경우 유기적 구성이란 말도, 이윤이나 이윤율도, 심지어 자본이란 말도 무의미해지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사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자본의 논리의 담지자’로서 행동하는 한, 즉 증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한, 자본가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소멸하는 특별잉여가치의 형태로든, 법적 장치에 의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이윤을 지속적으로 영유하는 독점지대의 형태로든 신기술을 개발한 자본가들은 이윤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노동력이 생산성이나 경쟁력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기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게 경쟁력에 관건이 된 자본가들은 이러한 비

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터이다. 따라서 불변자본 가치의 감소는 한계비용의 감소와 독립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 기계나 기술 관련 비용과 별도로 축소될 수 없는 비용이 있음을 추가해야 한다. 즉 건물이나 부동산, 원료 등이 그것이다. 사스키아 사센은 가장 탈물질화된 기업인 금융업의 경우에도 건물과 도로, 통신망과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청소부, 경비원, 캐쉬어 등)을 거대규모로 요구하며 이 때문에 금융자본이 그런 자원을 갖춘 ‘글로벌 시티’로 집중되는 경향마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assen, 1991).

인공지능을 비롯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전은 많은 경우 ‘탈물질화’의 선을 따라 지수적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기술적 대체를 저지할 수 없다면, 노동력의 감소는 이에 준하는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불변자본 비용의 감소를 야기하는 요소는 이윤감소를 저지하는 법적 장치나 소멸할 수 없는 물질성이 야기하는 비용으로 인해 결코 그런 속도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변자본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해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인 유기적 구성은 증가할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 ‘노동의 종말’과 이윤율

알다시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는 이윤율의 저하로 이어진다(Marx(III), 2001). 물론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에(Marx, 2001(III): 275~286),²⁾ 유기적 구성의 증가만으로 이윤율 저하를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 상쇄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이윤율 저하가 현실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저하가 중요한 것은 ‘산 노동’이 ‘죽은 노동’으로 대체됨에 따라 잉여가치의 원천이 감소해가는 ‘경향’이 자본의 축적법칙 자체 안에 내재함을 보여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쇄요인의 작용에 의해 극복되면서도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³⁾

이를 인공지능과 노동의 절대적 감소라는 전망과 연결하여 좀더 밀고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해 가변자본의 절대적 감소에 따른 이윤율의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수학적 극한 개념을 이용한 사고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사용에 따라 노동이 절대적으로 축소된다면, 다시 말해 가변자본이 0에 가까이 간다고 가정하면, 이윤율

$$\pi = \frac{s}{c+v} \quad (c \text{는 불변자본, } v \text{는 가변자본, } s \text{는 잉여가치})$$

는 $\frac{s}{c}$ 로 수렴한다. 이는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이윤율 변화의 역사적 경향의 극점을 표시하는 데, s 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노동가치론의 가정을 유지하면 s 의 원천은 v 이므로 v 가 0에 가까이 가면 s 또한 0에 가까이 가야 한다. 그러면 이윤율 또한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노동가치론의 가정에 의하면,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기술은 이윤 없는 생산으로의 경향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해석 ①).

다른 하나는 s 가 0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이다. 노동이 소멸해도 잉여가치는 남는다는 것이다.

2) 맑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쇄요인으로 들고 있다. 노동착취도의 강화, 노동력 가치 이하로의 임금의 인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대외무역, 주식자본의 증가 등

3) 이윤율의 추세를 주목하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실에서도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두드러지게 그러한 추세가 두드러진다(가령 Brenner, 2002; Duménil/Lévy, 2006). 1990년대 이후의 ‘금융화’는 이윤율의 저하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과잉자본이 금융적 증식 자체 안에서 순환하는 새로운 존재형식이다.

이때 s의 원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노동가치론을 포기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 s는 불변자본 c를 원천으로 한다. 즉 기계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해석 ②). 그렇다면 이제 착취관계는 자본과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과 기계, 자본과 인공지능 사이의 관계로 치환된다. 나는 이런 관계 역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지금 다루려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기에 일단 찢혀두기로 한다. 둘째는 여전히 노동가치론을 버리지 않는 경우인데, s가 노동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지만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획득되는 독점지대로 해석하는 것이다(해석 ③).

해석 ③은 s의 원천이 소멸되어 s가 0이 된다는 해석 ①과 양립가능한 것이기도 한다. 더불어 두 경우 모두 노동가치론의 가정을 공유한다. 따라서 양자를 결합하여 인공지능과 '노동의 종말'에 따른 이윤율 변화의 역사적 경향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자본과 노동, 혹은 자본과 대중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동가치론의 가정을 유지한다면, 일자리가 0에 가까이 간다는 조건에서 이윤율은 0으로 수렴한다. 이는 '이윤 없는 생산'으로의 경향을 뜻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은 법이라는 '경제외적 강제'를 사용해 잉여가치를 독점지대의 형태로 유지하려 한다. 즉 s는 불변자본의 독점에 기반한 독점지대(기술지대) 형태의 잉여가치다.

3) 인공지능과 '이윤 없는 생산'

인공지능이 선도하는 기술은 이윤율에 관해서도 모순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것은 불변자본 비용의 감소나 상대적 과잉인구의 생산, 생활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이윤율 저하의 상쇄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변자본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가령 과잉인구에 의한 임금저하나 노동착취율 강화 같은 상쇄요인은 이윤율 저하의 상쇄에 기여하기 어렵다. 기술적 발전에 따른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감소 또한 다르지 않은데, 이는 오히려 이윤율 저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네트워크와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으며 행해질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많은 경우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될 것이다. 구글이나 아마존, 유튜브, 넷플렉스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그렇듯 대부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유지와 보수, 개선에 드는 비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기술적 차원에서 한계비용이 대단히 작다.

다른 한편 이러한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공지능은 학습 기회가 늘어나기에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서비스일수록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이고, 이는 다른 사용자를 다시 불러 모으는 양의 되먹임으로 이어진다. 흔히 '네트워크 효과'라고 명명되는 이러한 체증효과는 가능하면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본을 '강제'한다. 이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인터넷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러하듯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광고를 중심으로 한 다른 수익모델을 추구하게 된다. 이전에 유료화하려던 포털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실패했듯, 유료화하려는 시도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다. 신체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취합하여 평가해주는 프로그램들의 미래는 아마도 의학적 진단을 포함하게 되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학적 진단 같은 것조차 유료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영역에서 이윤율은 광고 등의 외부적 수익이 없다면, 그 자체로는 현저하게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 한계비용의 감소가 생활수단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감소시키지만,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이는 이윤율 저하의 상쇄요인이 아니라 이윤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상쇄요인은 불변자본으로 사용되는 기계 등의 가치를 감소시켜 불변자본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또한 반전의 계기를 포함한다. 불변자본 감소효과는 저하된 가치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자본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또한 자기 상품의 판매자인데, 그런 상품의 생산하여 판매해야 하는 자본가의 입장에서선 한계비용의 지수적 감소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가령 인공지능은 기계들을 ‘스마트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기계들의 인공지능화는 기계들의 기능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물질적 상품이 점차 ‘정보재’에 가까워지게 되는 됴름,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탈물질화’될 것임을 뜻한다. 물론 인공지능화된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동반되겠지만, 그런 하드웨어의 비용가격은 ‘무어의 법칙’에 준하는 양상으로 감소할 것이며, 그 성능은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 상품들이 정보재화하게 됴름 따라 상품이 갖는 물질적 성분이 사라지는 않겠지만 전체 상품에서 그 비중은 현저히 줄 것이다. 정보재의 복제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나 상품의 한계비용은 0에 가깝게 저하할 것이다.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것은, ‘지적재산권’ 같은 경제외적 강제가 없다면 돈을 주고 사야할 필요성이 사라짐을 뜻한다. 역으로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상품을 남들이 살 이유가 사라짐을 뜻한다. 그렇다면 그 상품을 생산하여 얻을 자본가의 이윤율 또한 절대적으로 감소하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더 정확히는 맑스가 ‘생산력’이라고 명명했던 관계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내지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 없는 생산의 경향은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고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된 삶의 가능성을 뜻한다. 이윤 없는 생산은 필요한 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한계비용이 거의 없기에 큰 비용 없이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시대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필연의 영역, 생존하기 위해선 노동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로부터 나가는 출구에 근접했다 할 것이다.

물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본이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따로 생산하지 않을 터이니, 역으로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게 되리라고 반박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겐 이윤 없는 생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혁명과 궤를 같이 한 카피 레프트 운동의 정신이나, 소프트웨어나 정보재의 ‘무단사용’, 혹은 하드웨어 공유운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공유운동이 시사하는 것은, 한계비용 제로인 상품의 생산을 굳이 자본에 의존한다는 가정 자체가 완고한 자본주의적 부당전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인공지능과 거대 네트워크에 연결된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DIY의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3D 프린터가 이런 DIY 운동과 관련하여 발명되고 발전했다는 것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Rifkin, 2014)).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나 상품의 발명 등이 멈출 것이라는 가정 또한 비슷하다. 자본주의적 개발과 발명의 길이 있다면, 장인적인 개발과 발명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결합된 DIY의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속도와 리듬, 양상을 갖는 다른 개발과 발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에 포함된 이러한 잠재력이 현행화되기 힘든 것은, ‘노동 없는 생산’은 추

구하면서 ‘이윤 없는 생산’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본이 법적인 장치를 이용한 독점을 통해 이러한 기술적 발전의 성과를 지대로 전환하여 수취하기 때문이다. 한계비용 제로인 정보재의 복제나 이용을 가로막고 독점지대를 수취하기 위해 이른바 지적 재산권의 범위와 강도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심지어 새로운 연구나 개발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Nelkin/Andrews, 2006). 노동 없는 생산에 대한 추구가 야기하는 이윤 없는 생산이라는 궁지를, 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종말을 연기하고 저지하는 것은 정보재 등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상품의 가치를 ‘지대’를 통해 유지하며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체제다(강남훈/이채언, 2005). ‘지대 자본주의’로 불러 마땅한 체제다.⁴⁾

하지만 역으로 이는 이후 자본주의가 그런 ‘경제외적 강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일반화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가 현재의 생산력 발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하겠다. 경제외적 강제가 경제적 강제로 대체된 것, 그것이 전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를 구별해주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였음을 안다면, 지대 자본주의는 비록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이미 자본주의를 벗어난 통제가 자본의 존재근거가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아마도 지대 자본주의로부터 탈주하는 선들이 다양하게 그려질 것이다. 하지만 지대 자본주의 자체의 소멸을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유사회’의 전망이 넓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적어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유료화 시도의 반복적인 실패가 보여주듯 통상적인 정보재보다 지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는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은 공유사회의 친구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다. 그것은 통상적인 정보재 이상으로 자본주의적 틀을 넘어설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집약되는 생산력 발전과 그것을 자본의 틀 안에 가두기 위한 지대 자본주의적 대응이 이후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방식을 규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자본의 재생산방식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자본이 어떤 축적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다.

3. 인공지능과 자본의 재생산 문제

자본의 재생산과 순환을 다루기 위해 맑스는 생산영역 전체를 생산재 생산부문(I 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II 부문)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상품자본이 실현되어 자본의 순환이 ‘재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잉여가치 s 를 추가적인 불변자본(sc) 및 가변자본(sv), 자본가의 추가적 소비분(sk)으로 다시 분할하면, 양 부문의 상품 W 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W_1 = c_1 + v_1 + sc_1 + sv_1 + sk_1$$

$$W_2 = c_2 + v_2 + sc_2 + sv_2 + sk_2$$

확대재생산의 경우 균형을 위한 조건은

$$v_1 + sv_1 + sk_1 = c_2 + sc_2$$

이다. I 부문에서 생산된 상품가치 중 임금으로 투여된 것 및 잉여가치 중 추가적으로 임금에 투여된 것, 그리고 잉여가치 중 자본가가 소비재의 구매에 사용할 것의 합이 II 부문 생산물

4) 이는 인지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이들 또한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가령 조정환, 2011 등).

가치 중 불변자본 및 그것의 증가분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려면, 이러한 재생산의 균형조건과 결부하여, 다시 말해 맑스 말대로 상품자본의 실현이라는 문제와 결부하여 검토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도입이 자본의 재생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선, 앞서 한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 없는 생산’이라는 극한값에 접근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용의 극한적 감소를 동반하리라는 가정을 이용하자. 이는 생산된 상품의 가치 총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잉여가치 중 임금증가분으로 투하되는 sv_1 은 0, 아니 차라리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유지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전제되어야 하니, 앞서와 동일하게 이윤율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며,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지대 형태의 잉여가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수취됨을 뜻한다. 즉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한계비용의 감소분만큼 감소되지 않거나 최소한 매우 느리게만 감소될 것이다. 한계비용은 아주 작은데 지대 형태로 ‘가치’가 유지되기에 지대형태의 잉여가치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이다. 그 경우 확대재생산 조건의 양변에 대해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변자본이 0에 수렴한다는 조건에서 극한값을 구하면

$$sk_1 = c_2 + sc_2$$

이 될 것이다. 이는 극한값이므로 실제로는 매우 적은 임금몫이 $c_2 + sc_2$ 의 작은 부분을 구매하여 소비하는데 사용되긴 하겠지만, 우변의 대부분은 잉여가치 중 자본가가 소비재를 사는 것을 통해서 판매되어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생산성의 증가나 한계비용의 감소를 고려하면 동일한 가치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소재적 크기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가가 족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소비하고자 해도 개인적 소비로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려면 생산물의 많은 부분이 사치품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치품 생산에 적합한 것은 인공지능 관련기술보다는 장인적 수공업제품이다. 이는 상품생산의 경향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상품의 증가분을 소비하는데 사치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의 소비 증가나 사치재화를 통해 II 부문에서 생산된 불변자본 및 그 증가분을 소비하기는 어렵다.

대중의 구매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는 광고가 단지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인터넷 관련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알다시피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비롯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의 수익이 대중들의 사용료 아니면 광고에서 나온다. 대중들의 사용료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지만, 혹시 사용료를 받게 된다 해도 대중의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황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순 없기에 사업 자체가 곤경에 처하기 십상이다. 광고료라는 수익원천 역시 쉽지 않다.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소멸한 상황에서 광고로 인한 추가적인 이득이 많을 수 없기에 광고를 많은 비용을 들여 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마찬가지로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첨단산업’의 존립을 궁지로 몰고 갈 것이다.

여기서 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른 출구를, 자본가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sk_1 의 크기를 줄이고 거기서 차감되는 만큼을 c_1 의 확대를 충당하고, 그에 맞추어 소비재 생산을 축소시켜 $c_2 + sc_2$ 의 크기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다. 사치재화와는 반대로 생산적 소비로, 이른바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치달리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예전에 ‘불비례’로 공황을 설명하면서, 두 부문간 균형에 적합한 비례를 찾음으로써 ‘과소소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 오래된 입론을 떠올리게 한다. 생산적 소비의 비율을 극대화하고 개인적 소비를 극소화하는 극단적인 '금욕적인'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중적 소비를 확장해온 지금까지의 축적의 경향에 전적으로 반하여, 경제활동이 결국 자본가 간의 거래로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해서 한계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변자본에 투여될 생산수단의 가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생산적 생산의 규모 확대를 통해 재생산의 균형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전보다 훨씬 큰 비율로 생산의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은 더욱더 난감한 게 될 것이다. 그래도 자본가 소비의 사치재화와 생산을 위한 생산의 결합을 통한 재생산이 가능하다 할 수 있을까? 모를 일이지만, 최대치로 사고하기 위해 가능하다 가정하자. 그러나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자본가들만의 경제, 자본가들만이 속한 체제가 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이 경우 구매력 없는 대중들은 자본주의 외부에서 '불법적인' 복제와 공유체제를 발전시키며 비자본주의적 '코문주의'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가동시키는 생산을 위한 생산의 거대체제와 그 외부에 있는 반자본주의적 대중이 병존하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극단적인 부와 빈곤의 양극화 속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의 적대적인 두 세계의 병존.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경우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내전이 영속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잉여가치 sk_1 중 가능한 소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생산 아닌 '파괴적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전에는 전쟁이 주로 이런 전략의 출구가 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고 현행화된 전쟁을 크게 웃도는 잠재적 전쟁에 대한 비용은 이미 현실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잠재적 전쟁에 투여되는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큰 상태이기에, 새로운 세계대전이나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것이 인공지능과 정보재가 제공하는 잉여가치(지대!)를 흡수할 것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듯하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파시즘적 세력이 점점 더 큰 힘을 얻어가는 것을 보면 대규모 전쟁이 '해결사'로 등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겠지만, 이런 전쟁이 항구적 내지 반복적인 것이 될 수 없는 한 인공지능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적 잉여가치의 출구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잠재적 내전을 위해 투자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다. 사실 앞서의 균형조건은 임금 등 노동자나 대중들의 개인적 소비에 총당할 소득의 절대적 감소를 뜻하는데, 이는 이미 슬로건으로 등장한 '99%'까지는 아니더라도 필경 90%에 육박하게 될 대중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것이며, 강력한 빈곤이 일반화되는 사태를 함축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이 빈발하고 있음은 이런 사태를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본가들이 지대형태의 잉여가치 취득을 포기하거나 대가 없는 소득의 분배를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저항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거대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인 내전상태에서 자신들의 생산 및 생활의 공간을 방어하기 위한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잠재적 내전이 소비할 수 없는 부를 사용하여 재생산의 조건을 유지하는 출구가 될 것이다. 이 길을 따라 간다면, 필경 끔찍한 항구적 내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셋째, 소비하기 어려운 잉여가치를 소재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확대하기 어려운 난관을 피해, 생산이 아니라 금융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미 1980년대 이후 제도적 조건을 확보하여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온 이른바 '금융화'는, 인공지능이 굳이 아니어도 생산영역에서의 이윤율이 낮아지는 조건에서 굳이 생산자본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업에 투자하는 길을 선택하는 전략이 이미 충분히 현실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윤이 잉여가치를 원천으로 한다

는 가정을 강하게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화된 자본의 이득의 원천은 금융업 안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물생산과 분리된 채 급증하던 금융수익이 사실은 공적 자금이나 ‘개미 투자자’의 주머니를 사후적으로 터는 방식으로 총용된다는 점은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직접 생산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주는 인공지능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적 버블의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적 자금의 형태를 취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은 자본가들 자신의 주머니를 돌려가며 터는 게임이 될 것이다. 생산과 생활의 경제와는 분리된 거대한 먹구름의 세계가 여분의 잉여가치를 흡수하며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다.

넷째는 위의 세 가지 전략과는 상반되는 전략인데, 사회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생산을 위한 생산으로 치달리는 생산규모의 확대나 잠재적 내전 등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직접적 소비를 위해 투여하는 것이다. 아마도 인공지능의 확산에 대한 예측 속에서 급속하게 지지자들을 얻어가고 있는 ‘기본소득’이 그런 경우의 한 형태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중들의 구매력이 일정 정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c_2 + sc_2$ 전체를 자본가가 소비하는 난국을 모면할 수 있다.

앞의 두 전략은 서로 상관적이며, 넷째 전략과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셋째 전략은 이윤율 감소를 상쇄하는 방법으로 다른 전략 모두와 양립가능하다. 앞의 두 전략은 처음에 언급한 사치재화의 전략과도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의 결합이, 실현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는 알 수 없지만, 노동자나 대중의 저항이 없다면,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자본가’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선택할 출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출구는 자본이 독점한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할 때조차 정치적으로는 지속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미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영화의 미래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4. 축적체제의 ‘역사적 경향’

앞서 검토한 자본의 축적전략은 그 성향이나 상관성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극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사치재 생산, 생산을 위한 생산이나 파괴적 소비 등이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로 묶일 수 있다면, 대중의 직접적 소비를 위해 잉여가치를 투여하는 길이 그와 반대지점에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이후 가능한 축적체제의 두 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저 두 극 사이에서 그려질 상이한 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법칙에 역사적 경향이 존재하며, 자본주의의 축적 전략이 그것을 거스르며 진행되는 어려운 것처럼, 자본의 축적체제 또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는데, 새로운 축적체제 또한 축적체제 자체의 변화경향을 거스르며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 축적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말해 인공지능 도입으로 발생할 재생산의 문제를 자본이 어떤 전략으로 풀어갈지를 예측하기 위해선, 저 상반되는 미래 가운데 어떤 축적체제가 현실화될 것인지를 보려면, 축적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며 역사적 경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축적체제’나 ‘조절’이라는 개념의 정의나 그와 결부된 이론적 전제들을 받아들이는가 여부와 별개로, 자본 축적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축적체제의 변화양상을 주목하게 해준 것은 분명 프랑스 조절학파의 공헌이다(Aglietta, 1994 등).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현세적 금욕주의 체제’(Weber, 1994)인 고전적인 축적체제에서 포드주의 축적체제로 이행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가시화된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긴 하지만, ‘유연성의 축적체제’로 이행했다고 나는 이해한다(이진경, 2008).

먼저 생산과 노동의 양상. 금욕적인 축적체제에서 생산은 공장단위로 분절되어 있었고, 생산 방식은 기계의 도입에 의해 노동을 포섭하고 통제하는 양상을 취하고 있었다. 테일러주의는 이러한 금욕적이고 훈육적인 공장체제 하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형식을 도식화하고 일반화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포드주의 축적체제에서 생산은 여전히 공장단위로 분절되어 있었지만 어셈블리 라인의 도입을 통해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대규모 공장체제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유연성의 축적체제에서 생산은 도요타의 이른바 ‘간반생산방식’으로 시작된 되먹임 구조를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도입했다. 이로써 소비라는 순환의 ‘최종’ 국면을 창고와 유통은 물론 생산이나 상품의 기획에까지 되먹임시키는 새로운 생산체제가 성립되었다. 생산자본의 모든 순환계기들이 서로 다른 계기들로 되먹임되어 구매자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생산체제다.

이로써 생산은 공장의 벽을 넘어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점, 혹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정에까지 확장된 외연을 갖게 되었고, 소비는 생산과정의 뿔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많은 ‘상업적’ 활동에 필요한 활동이나 행정적인 일들마저 모든 개인이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고, 스마트폰은 그런 일들을 가정을 넘어서 어디서든 각각이 처리해야 할 편재하는 ‘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일은 그것이 ‘내가 필요한 일’이나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도 그 대가를 요구하기엔 너무도 작게 분할되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없는 ‘노동’이다. 아무런 대가도 없는 새로운 ‘노동’이 공장을 넘어 모든 곳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전에는 고용된 노동자가 하던 것을 대체한 것이며 지불되지 않은 채 영유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분노동의 형태다. 이는 임금 지불 없이 수행되는 노동이란 점에서 ‘고용 없는 노동’이다. 이를 ‘미시적 부분노동’이라 하자. 고용 없는 노동은 노동 없는 생산의 그늘에 가려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이런 경향을 좀더 가속화한다. 이는 이제 사회 전체로 확대된 생산의 장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전에 생산이라고 분류되지 않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이런 미시적 부분노동이 이루어진다. 일상적 삶의 많은 부분이 고용 없는 노동이 된다. 단적인 것은 일상생활이나 취미활동조차 인공지능으로 처리되는 네트워크상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시적 부분노동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인공지능은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입력하는 자료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 자본에 필요한 활동이든 생활에 필요한 활동이든 혹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나 공간의 이동,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보고 하는 모든 것을 입력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다운받는 입출력 활동은 모두 인간이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고 미세해질 것이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기획, 생산과 영업 등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활동은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에 점점더 필수적인 일부가 될 것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처리장치’와 거대한 네트워크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부분노동, 잉여노동의 형식은 이제 직접적 고용 없이, 이렇게 일상활동을 통해서 잘게 쪼개어진 미시적 노동으로 변환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노동이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노동이면서도 노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그림자 노동의 형식이 될 것이다. 생산과 노동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럴 리 없다. 일상적 활동

전반이 미시적 부불노동이 되어 고용 없이 착취되는 것, 고용 없는 노동의 일상적 일반화, 이는 자본의 축적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서 읽어내야 할 일반적 경향이다. 미시적이기에 무의미한 양으로 보이고, 하나의 기업에 이용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에 분할되어 이용되기에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지만 행하는 사람 개인으로 보면 일상 생활 전반에 속하는 활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노동으로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부불노동 형식에 대해 ‘지불’을 받는 새로운 임금의 형식이 필요하다 해야 하지 않을까? ‘총자본’이자 자본의 대리인인 국가를 경유하여 지불받는 새로운 임금의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는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축적체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과 소비. 잘 알려진 것처럼, 금융적 축적체제는 소비를 최소화하고 축적과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의 축적체제였다면, 포드주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요체로 하는 축적체제였다. 이후 소비는 악덕 아닌 미덕이 되었고, 소비를 촉진하고 촉발하는 새로운 욕망의 배치가 출현했다. 소비가 의무가 된 사회, 소비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된 사회, 소비를 위해 미디어와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부’해야 하는 사회로서의 ‘소비의 사회’(Baudrillard, 1992)는 이러한 축적체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일 것이다. 유연성의 축적체제는 포드주의에서 ‘공급자 관점’의 일방적인 상품생산이 새로이 ‘시장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유연한 생산을 추구한다. 소비를 촉발하는 욕망의 배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게 되었고, 대중을 소비의 주체로 유인하고 호명하는 주체화체제는 새로운 욕구의 주체로 대중들을 바꾸어 놓았다. 컴퓨터와 네트워크는 이런 소비자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되먹임하여 생산과 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고, 이로써 가변적인 욕구에 적응하는 새로운 축적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소비자 구매이력이나 개인적인 활동정보를 가공하여 개개인의 관심과 욕망, 취향을 포착하여 그가 원하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광고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평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이후 욕구를 예상하여 ‘유혹’하고 판매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이 전면화될 것이다.

생산된 상품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 전반으로 다가와서 ‘유혹’하는 이러한 사태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무리 ‘다품종 소량생산’을 한다 해도 이미 문턱을 넘은 전반적 ‘대량생산’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소량생산’이란 말에 포함된 ‘문법의 환상’에 속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량생산 체제 안에서 상품의 다변화를 위한 것이고, 소비시장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이름임을 알기 어렵지 않다. 즉 그것은 대량생산의 변화된 형태지 그것의 반대가 아니다. 맞춤형으로 상품을 다변화한다고 해도 상품생산량이나 생산체제의 대량성은 돌이킬 수 없다. ‘무어의 법칙’을 빌어 자주 언급되듯 생산물 가격의 지수적 하락과 인공지능으로 가능하게 될 한계비용의 지수적 감소는, 소비에 대한 적응성 여부나 되먹임을 통한 생산량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도 대량생산 체제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중적인 소비시장을 포기한 채 자본축적이 가능할지 더더욱 의심하게 한다. 인공지능의 전면화로 예상되는 대중들의 일자리와 소득의 격감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소비-생산의 양상을 돌이켜 자본가들의 소비재만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생산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소비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를 위한 소득을 분배하는 새로운 전략이 더 쉽고 현실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대중적인 소비 없는 생산’이란 자본의 입장에서 보아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입장의 좌우를 떠나서 대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급속한 속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대중은 물론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에게 확산되어 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축적 체

제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없는 생산과 고용 없는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적 기초는 조세수입인데,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조세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리라는 전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대중적인 소비가 절대적으로 감소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조세원천인 ‘부가가치세’(소비세)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반면 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절대다수가 소득 없는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혹은 생존의 불안에서 나오는 대중의 거대한 저항을 ‘진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커 질 것이다. 조세자원은 절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필요한 재정규모는 유례없이 증가하는 것, 이 극단적인 모순을 국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모순을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또한 이후의 축적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5. 자본 축적의 역사적 경향과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후 자본주의가 재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선 고용 없는 노동과 노동 없는 생산, 그리고 일자리의 현저한 축소에 따른 대중의 소득 감소로 인해 야기될 상품의 유통과 소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종종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고 요약되기도 한 이 문제는 이전에 흔히 ‘과소소비’의 문제로 명명되곤 부적절한 입론으로 쉽게 일축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인 과소소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절대적’이란 말을 붙여야 할 과잉생산의 문제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생산과 소비의 대립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이전과 다른 지점으로 그 위상을 바꾸었다고 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전면화로 집약되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일자리의 절대적 감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과 이윤율의 저하, 그리고 한계비용의 절대적 감소와 그에 대항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지대 착취장치의 강화 등 생산과 고용, 착취의 양상 전반에 발생한 근본적 변화로 인해 발생할 사태가 집약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생산의 조절에 의해 대량생산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이켜 소득을 가진 자본가 인근 주민의 소비재로 생산을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생산은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 자체를 위협할 절대적 과잉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산의 조절과 축소에 의한 해결이란 자본가와 대부분의 일자리 없는 대중간의 항구적인 잠재적 내전상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자본가들이 설정한 독점지대를 지불할 사람들마저 현저히 축소됨을 뜻한다. 이 경우 자본주의의 유일한 강점이었던 생산의 활력이 대중적 소비의 소멸과 함께 소멸하는 공멸의 과정이 시작되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분명 자본주의 자체의 종말로 가는 길이 될 게 분명하다.

오히려 현실적인 것은 이미 뉴딜과 케인즈주의에서 선례를 보여준 것처럼,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분배해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미시적 부분노동을 착취하며 자본관계를 지속하는 길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 이후의 자본주의에서는 아마도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제도가 새로운 임금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기본소득은 아마도 직접인 고용 없는 노동을 고용 없는 임금으로 지불하는 새로운 사회적 고용형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후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문제

이다. 어떤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구현할 것인가?

어쨌건 이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체제로부터 전 사회가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본주의의 종말로 오인해선 곤란하다. 매일의 일상생활을 착취하는 미시적 부분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고, 그것을 독점지대형태로 착취하는 자본주의는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도입효과에 대한 논란을 떠나, 기본소득은 대중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도 않은 고용을 애써 찾아다니는 대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삶을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고용 없는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노동 없는 생산을 통해 노동력을 판매함 없이 자신의 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가능성을. 이런 이유에서 기본소득의 범위는 물론 크기를 확대해가는 것을 흔히 하듯 ‘개량주의적’ 개선으로 환원해 비판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 생존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풍요’를 제공해줄 리는 결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생존에 필요한 최소치에서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도 생산된 상품의 소비에 필요한 최소치로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생활은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치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한계 비용이 축소되고, 다양한 능력과 기술, 물자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 형태의 공유관계를 구성한다면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물자를 직접 생산하며(새로운 DIY) 나누고 생활하며 자본이 생산한 상품이나 자본에게 지불할 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양상은 상품소비를 축소시켜 소비를 위한 자본의 지출을 점증시킬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나 ‘코뮌’이 노동 없는 생산의 시대에 축소된 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대중들의 새로운 생존형태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본주의에서 이탈한 새로운 관계와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안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외부를 확장해야 한다. 인공지능 이후에도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거나 사라질 거라곤 쉽게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의 외부가 확대되는 만큼 자본주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아니, 그러한 외부에 들어가면서 자본의 세계에서 발을 빼는 만큼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노동자계급의 편인가? 생산력 발전에 대한 믿음 속에서라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론 그럴 거 같지 않다. 그것은 자본 이전에 노동을 소멸시킬 것이다. 노동의 소멸과 함께 노동자계급 또한 소멸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본주의를 그 한계지점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무덤을 파는 자본가의 에이전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이 살아있는 대중 없이 존속할 수 없는 한, 그들의 일상적인 부분노동 없이, 그들이 지불하는 지대 없이 존속할 수 없는 한, 나아가 그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없이 존속할 수 없는 한, 그것은 자본주의를 이윤 없는 세계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끌고 들어가는 뜻하지 않은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